

김승원 사퇴 후폭풍… 與 지지율 반전 노리고 野 책임론 부각

추석 명절 정국 주도권 차지 신경전
與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논란 정리”
野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실패”

‘신약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이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일 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서로를 향해 공세를 가했다. 이를 통해 추석 명절 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 논란으로 가라앉은 당정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주력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 의원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야권이 제기해 온 ‘연임 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뉴스시스

헌’과 ‘공소 취소’ 논란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임 논란에 대해선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고, 공소 취소 논란도 “(국회는)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

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정무여당의 인사검증 실패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명절 밥상에 정부의 각종 실정을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당장의 화살을 피하고 있을 뿐, 재경부 이형일, 국토부 홍지선, 모두 부적격자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과 조세정책까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만 골랐다”며 “그래놓고 검증까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특히 인사 검증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누가 이런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며 “‘만사현통’ 김현지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핵심 국무위원 후보 2명이 연달아 낙마했다. 이진숙, 강선우, 이혜훈 후보까지 더하면 벌써 5명째”라며 “처참히 무너진 이재명정권 인사 시스템, 대국민 사과와 김현지 등 인사·민정 라인 전면 경질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

구했다.

여야의 이 같은 행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실시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0%, 국민의힘은 27%로 나타났다.

다만 이 지지율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이후 여론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 결국 민주당은 분위기를 반전시켜 당정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 국민의힘은 여권의 약재를 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걸려 있는 셈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용혜인·김승원 이어… 국힘, 강신철 정조준

강신철 후보자 도덕성 집중 조명
민주 “국회서 정책으로 경쟁하라”

용혜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추석을 앞두고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여론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절 민심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며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경쟁하라고 맞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신철 후보자와 가족의 철거민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입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

보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스스로 ‘정권 안보용’ 장관임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강 후보자의 대북 인식과 사관학교 통폐합, 조기 전사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입장 등을 언급하며 “강신철이 아니라 ‘간신철’, ‘간신철거민’”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후보자와 부친, 형이 잇따라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보상’이라던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말이 없다”며 “철거민의 몫을 가져간 사람에게 국민의 인위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지 관리와 재산 신고 누락에 대

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사퇴와는 별개로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고리로 한 대외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에 후보자가 사퇴해도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게 왜 계속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든 갈 수 있게 준비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민보고대회와 장외투쟁 추진을 정쟁으로 규정하며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명절 밥상 민심을 듣겠다면서, 그 민심을 듣기도 전에 할 말과 낱짜를 먼저 정해둔 것인가”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여는 자리는 경청인지, 동원을 위한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국민보고대회의) 명분도 사라졌다. 그런데도 장

외집회를 고집한다”며 “애초부터 민생은 후순위였고, 정치적 공격이 1순위며 명분은 적당히 붙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하라”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 추석 밥상에 올릴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말했다.

정차권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의 명분과 효과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외투쟁은 나가는 쉬운데 들어오기가 어렵다”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번 청문 정국은 사실 한동훈 의원의 승리지, 국민의힘의 승리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외투쟁이 국민의 호응으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누가 그 당을 이끌고 당의 얼굴이 되느냐가 그 당의 지지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의원과의 연대와 복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국회 보고

수익성·원전·LNG 쟁점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를 오는 21~22일 추진한다.

이번 보고에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한미간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설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및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 등 세부적인 협상 안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1200억 달러 규모로 거론되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노형을 먼저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간 타협점을 찾았을 지도 관심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 투자 프

로젝트를 21일 또는 22일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와 규모,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확보 등 대미 투자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보고 일정을 늦춘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대미 투자액)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보고에서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부담 등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제시될 지가 최고 관심사다.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 복합화력발전소가 거론된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223억 달러가 투입돼 가스 터빈발전 1.4GW(기가와트),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I-SPV, PPA,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PA와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참여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 계약 등을 우선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협상에서 이를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미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호 사업으로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의 APR-1400 노형을 최소 2기 이상 포함하되, 우선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미국이 자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을 중심으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기류가 생겼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인수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를 확보하고 이사회에 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5~10% 수준의 소수지분만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 150억~200억 달러를 단순 적용하면 지분 15%의 가치는 22억5000만~30억 달러로, 한화 약 3조~4조원에 달한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한국 측이 직접 지명하는 이사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을

지 여부도 관심이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를 옮긴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44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그동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후속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건 및 사업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미국 장기 국제금리 상승이 상업적 합리성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장기 국제금리는 원리금 상환이자율의 기준이 되는데 지난해 11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때 연 4.73% 수준을 보였던 미국 20년물 국제금리는 5.40%까지 올랐다.

/뉴스시스